

이덕일의 ‘역사의 창’



새해의 바람

인전 낚시배 참사의 통곡 소리가 채 가 시기도 전에 제천 화재 참사의 통곡 소리가 또다시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도 채 가시지 않았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인전 낚시배·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현 정권의 직접 책임으로 규정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규정해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참사를 당한 희생자지만 재수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동양 유학 사회의 사회 이론이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이다.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가 체계화한 천인감응설은 이런 사건들이 지상의 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다. 원래 세상은 하늘이 직접 다스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천명(天命)을 내려 대신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군주가 정치를 잘 하면 하늘이 순조로운 일이나 풍년 같은 상서로운 것

들을 내려보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각종 재이(災異)를 내려보내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가뭄·홍수 또는 잠비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정사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반성하는 수성(修省)을 하거나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때로는 자신의 정치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언(求言)도 했다. 임금의 구언에 의한 응지(應旨) 상소에는 아무리 심한 비판이 적시되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박근혜 정권 몰락은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세월호 사건 당시 일급 시간 동안 불분명했던 행정적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모든 국가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참사와 자신을 분리 대응했던 무지와 오만이 단초였다.

나아가 무려 304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전대미문의 참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반

정권 운동으로 취급했던 비인간적인 행태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었다. 진상 규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족들의 슬픔을 조롱까지 하다가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자금의 상황은, 마치 하늘이 인간의 분노에 감응한 천인감응의 현상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에도 인전 낚시배·제천 화재 참사 등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생명들이 계속 희생되는 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 세월호 참사에서 질타당했던 해결의 대응 미숙이 낚시배 참사에서 재연된 것이나 제천 화재 참사 때 소방 당국의 대응에 논란이 있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나 소방 당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의 문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제천 참사 나흘 만에 수원 광고 공사장에서 난 불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다. 제천의 건물주와 관리

인을 구속하겠다는 데서 보는 것처럼 그때마다 몇 명을 희생양 삼아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지나가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그때마다 국제 도박에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이 계속 실리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결과 지상주의였던 군부 정권들의 개발 독재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진단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일제에 부여했던 친일파들이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을 청산하고 정권을 장악했던 해방 이후 역사의 역주행에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역사의 청산 대상들이 역사의 주역을 청산했던 흑역사가 현 사회의 고장 난 시스템의 근본 원인이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되었다. 사실 지난해 겨울 시린 손으로 들었던 촛불은 이런 부당한 현실에 맞서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외침이었다. 새해는 이런 외침들이 국민 의식과 제도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가임기 여성의 건강 파트너 ‘산부인과’



오민정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고 진료받는 등 산부인과 문의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결혼 전에 본인의 자궁 및 난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들을 받을 수 있는데 흔히 ‘산전 검사’ 혹은 ‘예비 맘 검사’라고 불린다.

대부분 특별한 준비 없이도 병원에 내원해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각 시도별로 지원 항목이 다르니 검사 전 미리 확인해보고 방문해보는 게 좋다.

또한, 임신 중에 노출되면 태아 및 산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감염이 있으므로 임신 계획중인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이라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항체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고 접종 후 한 달간 피임 기간을 가져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신을 고려하기 한두 전에 미리 접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모에게 필수적인 예방 접종으로는 우선 MMR(홍역, 볼거리, 풍진)이 있다. 임신 초기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의 90%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

리게 되지만, 임신 16주에 감염되면 0~20%에서만 발생하고, 임신 20주 이후에는 발생이 드물다. 따라서 반드시 임신 전 풍진에 대한 최근 감수성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MMR의 경우 임신 중에는 접종할 수 없으며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필요하다. 산모는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경우가 많아 독감에 걸리면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심한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임신 초기(12주 이전)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접종을 고려하는 게 좋다. 독감은 매년 11~4월에 유행하므로 9~10월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궁암 예방 접종(가다실, 서바릭스)도 고려해야 한다.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가장 좋으며 성과관계 활발해지는 결혼 적령기 여성은 접종이 권유된다. 최근 부작용이 우려돼 청소년기의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 부어오름, 두드러기 등 국소 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의 전신 반응이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가 가볍고 수일 내 회복된다.

DT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도 놓쳐서는 안 될 예방 접종이다. 대부분의 임신부는 11~12세 때 백신을 접종 받았지만 효과가 10년 정도만 지속하므로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접종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파상풍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태교여행 등 임신 중 해외여행이 빈도가 높은 요즘은 미리 접종을 해 두는 게 좋다.

백일해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무호흡, 경련,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으나 점차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간접 면역으로 신생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임신 중 접종이 권유된다.

이 밖에 임신 전 항원·항체 검사를 통해 B형 간염과 수두 백신 등도 접종해야 한다. B형 간염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전염될 수 있으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로도 전염될 수 있어 가급적 부부가 함께 간염 검사를 받고 B형간염 예방 접종을 한 뒤 임신을 해야 한다. 수두 백신은 생백신이라서 임신 중에 접종하면 안 되며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고

광주형 ‘육아 부모할당제’ 도입 고민해야



윤난실 아이키우기좋은마을광산운동본부 상임대표

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산형 마더 박스인 ‘짬뽕 꾸러미’는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에 총생한 490여 명의 전제 신생아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을 육아 사각지대인, 임원 중인 아이들의 간병을 위한 병원아동보호사 30여 명이 이미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이미 국비를 확보한 공공 보육의 거점 ‘맘스리센터’가 건립될 것이다.

광산마을 짬뽕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동친화형 일자리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이 돌봄의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 등이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 지난 11월 광산구와 광산마을 짬뽕은 ‘아이키우기 좋은 일자리 포럼’을 열었다.

기업 문화와 공익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남성 육아 기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 골자는 더 이상 육아 부담을 ‘여성’의 몫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가정 양립’의 속성을 ‘일·생활 균형’으로 환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스웨덴에는 ‘부모 할당제’가 있다. 육아 정책의 하나인 부모 할당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각각 육아 휴직이 의

무적으로 부여되는 제도이다. 1995년 30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양육과 가사 부담에서 여성 편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90일로 연장됐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27%를 웃돌며, 1990년 7%에 비해 20% 상승했다. 양성 평등 육아 휴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지금 스웨덴에는 한 손에는 커피리테를, 다른 한 손으로는 우유차를 끄는 ‘라테파파(Lattepapa)’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스웨덴 아빠’를 상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다.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도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암담하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은 8.5%에 불과하다. 제도가 있어도 아빠들은 곤혹스럽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 여성은 출산·육아·일·가정 등 남성과 신체·물리적 환경이 다름에도 육체·심리적 부담이 컸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저출산’과 무관할 수 없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새로운 시도가 아닌 응당 자연스러운 가족 생태계의 변화라는 확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육아에 대한 인식과 의식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공공과 민간 기업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육아 환경 조성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육아 휴직을 이유로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부서 이동 등 위화감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내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육아 휴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남성도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함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전환,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야 한다. 또한, 육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여성들이 육아 경험을 살려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일자리를 다각도에서 창출해야 한다. 직장 맘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돌봄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육구 충족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저하되고 있다. 제도와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상황과 기회적 요인이 맞물리는 육아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社說

‘더불어 사는 광주’ 올해 800여 명 정규직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극화가 심한 순위가 21위에서 무려 5위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아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7로 전년도보다 0.003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양극화 해결은 어느 정부가 됐든 해결해야 할 핵심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의 해소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자 증세 등도 모두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추진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지나, 해져 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 비정규직 859명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했다. 당초 목표했던 분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미화, 주차, 안내, 경비 등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772명을 포함해 총 859명에 대한 공무원 전환을 완료한 것이다. 눈부신 성과다.

시는 이를 위해 민선 6기 들어 비정규직의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등 모두 120여 차례의 간담회와 TF회의, 실태조사, 설명회,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해법 찾기에 나섰다. 기존인건비 제도와 공기업 경영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은 정규직 전환자들의 환한 웃음과 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이 되어 후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빛나는 성과가 앞으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되어서 우리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소방차 못 들어가는 곳 58곳이나 된다니

불이 나도 좁은 도로 탓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광주·전남 지역에 58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나마 34곳은 주거지역이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소방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초기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일보가 소방차 진입 불가능 지역을 둘러본 결과 광주시 동구 소태동, 동구 필문대로에 접한 산수·지산동 등 광주 지역 7개 지역은 도로 폭이 2.5m 안팎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장흥군 대덕읍 탐사사 진입로와 같이 도로 폭이 1m 밖에 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소방차(5t 기준)는 너비만 해도 2.36m나 되는데다 화재 진압 장비 적재를 감안하면 도로 폭이 4m 정도는 돼야 진입이 가능하다. 급급차도 도로 폭이 3m는 돼야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소

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소방 호스를 직접 어깨에 메고 달려야 한다. 소방호스는 1개 길이가 15m이며, 10개까지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호스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50m이다. 소방차가 아닌 소방 호스를 동원한 화재 진압은 접근성과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광주시·전남도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소방차 진입 불가 광주 지역을 화재 취약지대로 따라 불안전우를 매겨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더불어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상시 예찰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문화재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 사이드카’(2인 1조)나 비교적 좁은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경량 소방차 도입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無 等 鼓

연말이면 연하장을 쓰느라 바쁜 적이 있었다. 우체국으로 달려가 연하장을 고르고 명함첩을 들춰 가며 1년 동안 도와준 이들에게 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던 시절. 그러나 어느 때부터가는 휴대전화 문자로 인사를 대신하고 또 언제부터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마저도 생각해 버리고 만다.

최근엔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는 이들이 많다. 며칠 전 “한해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함께 동영상 한 편 받

아베 마리아

구가 되고, 커다란 근심은 작은 것이 되지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그대처럼 슬플지 몰라요. 이리 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오늘날 그대의 문을 닫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껴 보세요.”

내친 김에 구노의 ‘아베 마리아’와 가장 좋아하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도 찾아 들었다. 영화 ‘매직스워드’ 삽입곡인 ‘기도문’ 영상 속 안드레아 보첼리는 흰머리가 소복이 내려앉은 중후한 모습이다. 멋진 목소리도 여전하다. 힘들기도, 행복하기도 했던 2017년을 떠나보내며 함께 듣고픈 음악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